

[현업단체공동성명]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윤석열 정부의 파상적인 언론탄압 공세가 급기야 극렬 지지자들의 언론인 테러와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때 벌어진 비속어 욕설 파문 보도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해진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탄압 시도 등 일련의 사태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긴 대통령의 발언이 화근이었다.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MBC 취재진에 대한 탄압을 “(욕설·비속어 파문) 가짜 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무엇이 악의적이냐’고 추가 질문한 MBC 기자는 정부여당에 의해 ‘난동’, ‘무례’ 같은 자극적 언사로 공격의 표적이 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극우, 극렬 지지자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 메일을 기자에게 무더기로 보내기 시작했고, 대통령 부인 팬클럽 회장임을 자임했던 강신업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다 족쳐버리라”며 백색테러까지 선동하고 나섰다. 급기야 일베 세력은 대통령에게 질문한 기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기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인을 향한 정치권력과 그 지지자들의 테러 위협은 SNS와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한 확증편향이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파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등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자들이 지지자들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국제적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사부터 유엔 연설까지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에서 집권 세력이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을 표적 찍어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다. 이는 언론자유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다.

이러한 백색테러 협박 준동 책임은 분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있다. 사과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 끝까지 책임을 언론에 전가하며, 언론 자유 훼손과 탄압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극렬 지지자들의 테러 협박 준동까지 초래한 것이다.

강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양념’이라고 옹호했던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며 집권했던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벌이는 테러와 살해 협박에 대해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 사람의 국민이 비판적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지금 상황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가?

해법은 결국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

우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당장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기 바란다.

아무리 특정 언론사와 언론인을 표적 공격한다고 해도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 시도의 정당성이 확보될 리 만무하며, 극렬 지지자들이 준동할수록 민심이반은 더 가속화할 뿐이다.

또한 폭력과 테러 위협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단속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태마저 방치한다면 언론자유 파괴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2022년 11월 2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